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달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프랑스의 샤르코지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올해 예정된 G20의 장국의 수장답게 그는 지구적 안보를 위한 UN의 개혁, 국제화율제도의 개편, 원자력 가격의 안정, 식량문제의 해결 등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새로운 현실의 공동 규범’을 내건 다보스포럼은 김이 빠진 느낌이다.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워브가 “불끄기보다 위협에 방으로 가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위기는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허향적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유럽은 유로존의 사수를 외쳤고, 미국은 이를 도울 것이라 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회의장을 암도했다. 천더미 상무장관이 중국은 앞으로 수출에 서 수입을 통한 소비 중심국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언급은 중국의 부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였다.

세계경제포럼에는 전세계의 대표적인 기업과, 정치가, 지식인 등이 참가한다. 당시 1월 말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고산지대 다보스에서 세계의 슈퍼엘리트들

이 적어도 사흘을 머무르면서 친목을 쌓고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눈속의 살찐 고양이들’이라는 조롱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로스(Soros)도 자신도 회원인 다보스포럼을 초국적 슈퍼엘리트 집단의 ‘대규모 카테일파티’라고 부른다.

세계경제포럼, 말보다 행동이 따라야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관·재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 협력을 다룬다. UN에 버금가는 경제적·정치적 위세를 지니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미래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밑그림을 그리는 초국적 기반의 싱크탱크로서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라는 전략적 역할을 한다.

나는 글로벌 NGOs를 공부하기에 세계화의 두 날개라 할 세계경제포럼과 세계 사회포럼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의 참가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여태

껏 기회를 갖지 못했다. 최저 등급인 기본 회원의 경우 약 6000만원의 연회비와 함께 2100만원을 내야한다. 일부 분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포럼의 주요 의제설정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각각 2억 8000만원과 6000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 개도국은 고사하고 선진국의 엘리트들도 참가가 쉽지 않다.

이번 다보스포럼의 총 243개의 분과에서 경제, 산업, 무역, 투자에 비해 사회, 환경, 빙ゴ, 질병 등을 비교적 낮게 다루어졌다. 경제위기를 안고 있는 오늘의 자본주의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물론 기후

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G20를 확인하는 자리로 이번 다보스포럼은 자리매김할 수 있다. 주요 정치경제적인 국제현안에 대한 글로벌 해결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슈바브가 지적한 대로 ‘경제위기 이후 서서히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정치와 경제의 힘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서 해고모니의 부재를 볼 수 있다. 비록 유럽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G20가 운위되듯 이미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무극(無極) 혹은 비극(非極)의 관점에서 세계 질서의 미래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다보스포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치아래 환경보다 개발,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글로벌 NGOs들도 국제엔에스티, 국제투명성기구, 옥스팜을 제외하고 더 이상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세계사회포럼이 정면대응하고 있다.

올해 세계사회포럼은 2월 6일부터 11일 사이 세네갈의 달카에서 열렸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구심력과 달리 세계사회포럼은 원심력이 작용하여 오늘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대 사회학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이경희



얼마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어반폴리(urban folly) 시민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세계 100대 건축가로 꼽히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화려한 만남 보고회장이던 대회의실은 방청객이 가득 찼다. 이날은 광주읍성 주변의 10곳에 대해 건축가들이 설계한 컨셉, 기본계획이 보고되는 자리였다.

어반폴리는 현재 강운재시장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창조도시가 구체화되어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

소통은 더더욱 중요하다. 시민보고회를 통해 시민참여의 통로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시민보고회에 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어려운 시간과 방법도 제시되지 않은 채 보고회는 주체적인 보고만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웠다.

어반폴리 초기 단계에서의 시민의 참여, 소통의 부족이 실행과정의 어려움과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한 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이 어반폴리와 추진에서 보여주었던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될까 걱정이다.

어반폴리는 현재 강운재시장이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창조도시가 구체화되어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

어반폴리,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젝트이다.

올 9월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일정에 맞춰 시공이 완료되는 어반폴리는 시민 보고회를 통해 청선을 보였다 할 수 있다. 아직 어반폴리에 대한 평가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있지만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필자는 현재 추진중인 어반폴리에 대한 아쉬움을 몇자 적어본다.

계획단계에서 어반폴리의 장소선정, 개념설정, 설계는 현재까지 전문가가 주로 진행돼 왔다.

시민보고회에서 참여한 설계자들은 각 공간에 대한 기억, 장소성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도시공간의 장소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기억에 대해 설계자와 시민간의 소통과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일상의 공간인 폴리 설치 장소에 대해 학생, 주민, 상인들과 소통의 과정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기본계획은 훌륭하지만 실현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당초 설계가 대폭 변경되는 사례를 최근 우리는 경험한 바 있기에 도시의 주체인 시민과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기고

최정주



소방법상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22개의 업종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강화된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유지·관리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를 업소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구획된 실(房)에 있어 화재를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의 경우 처음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법에 규정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주로서는 이에 대한 불편이나 이의도 많았지만, 제도 시행 후 ‘시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큰 나큰 성과를 얻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총 1273건의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수조사는 물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비상구 폐쇄 관련 이외에도 여려가지 유형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失보다는 得

지 않으면 허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잘 설치하는 반면, 영업 중에는 이를 시설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사실 여러 가지 소방시설 중에 비상구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닫혀있다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했지만 단속할 때 뿐 개선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광주시도 지난 2010년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지난해 총 537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위반행위가 중하고 확실한 84건에 대해서는 건당 5만 원씩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0만 원에서

유의해야 한다. 첫째 비상구, 방화문, 방화벽, 내부 마감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둘째 이를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셋째 이를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이를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로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신고제도가 최선의 대책인가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

만 전국적으로 해마다 화재로 인한 인

명피해가 400여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고 이용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신고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

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를 만드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의식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도시의

기본은 바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

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장〉

학교 급식에 트랜스지방 제한 규정 만들어야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을 규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모든 식품제조업체에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5g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사자 제대로 되지 않아 제한령이나 권장 취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에서 전체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면서도 지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트랜스지방에 대해 제한은 없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저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건설 수주 ‘반 토막’ 지역경제 앞이 안 보인다

광주·전남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액이 거의 ‘반 토막’이 나는 등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은 8천350억 원으로

2009년의 1조6천44억원에 비해 47.9%나 감소했다. 특히 전체 건설사의 65.1%가 1년 동안 애써 실적이 없거나 50억 원 미만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사정은 전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5조 5717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09년과 2008년에 비해 각각 35.8%, 40.1%가 급감한 수치다. 수주실적이 없는 건설사도 지난해 45개사로 전년보다 2배나 늘었다.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지역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여기에 돈줄까지 막혀 중견 건설업체가 잇따라 도산하는 죄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도 소리만 요란했지

실체가 없다. 4대강 사업, 기업도시 조성 등 대형 공공사업을 대형 건설사가 독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건설업의 장기불황은 지방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건설업은 지방경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 밀착형 산업이다.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크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생활이 갈수록 좁아지는 현상도 지방 건설경기의 불황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건설 부양책은 실기(失機)하기 일쑤고 일맹(一命)이 없다. 최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자체별 공공사업을 확대,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체제 강화,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등 지방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다.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한다면 지방건설의 활로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의 부작절한 행정이 도를 넘어섰고 있다. 김 청장이 특별인을 두둔한 듯한 정치적 행보를 하는가 하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을 전격 전보 조치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구청은 최근 서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동체 전 의원을 정책자문위원장에 임명하고 동 순방에 동행시켰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靡렸다. 과문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의 순방은 취소됐지만 현역인 김영진 의원과의 갈등에 따른 정당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 청장은 서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청의 재정난이 전임 청장의 무리한 신청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도자료로서 성격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전임 청장을 대해 다분히 감정적이라는데 끝이 않은 시선이다.

김 청장은 서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청의 재정난이 전임 청장의 무리한 신청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도자료로서 성격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전임 청장을 대해 다분히 감정적이라는데 끝이 않은 시선이다.

김 청장은 서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청의 재정난이 전임 청장의 무리한 신청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도자료로서 성격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전임 청장을 대해 다분히 감정적이라는데 끝이 않은 시선이다.

김 청장은 서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구청의 재정난이 전임 청장의 무리한 신청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도자료로서 성격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전임